

한반도 분단과 오키나와의 귀속/기지 문제

나리타 치히로(리츠메이칸 대학)

들어가며

보고자는 현재까지 오키나와의 귀속/기지 문제에 대한 대한민국(이하 한국) 및 중화민국의 관여나 오키나와 귀속 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제후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실시해 왔다.¹ 현재 오키나와는 일본의 한 현이지만, 1879년 '류큐처분'에 의해 일본에 편입되기 전까지는 조공체제 하에서 왕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1945년부터 1972년까지는 미국의 시정권 하에 놓였으며, 현재도 일본 전체 미군 전용시설의 약 70%가 집중되는 등 일본의 타 부현과는 다른 독자적인 역사를 가진 지역이다.

일본의 오키나와 반환 연구로서는 오키나와가 1972년에 일본에 반환되기까지의 외교 교섭 과정에 대해 지금까지 미일 관계나 미일 오키나와 관계의 틀에서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왔다.² 오키나와 반환을 둘러싼 오키나와 주민의 동향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복귀 운동을 중심으로 동시대사적인 검토가 진행되고 있으며,³ 오키나와에서의 자료 환경의 대폭적인 개선에 따라 오키나와의 정치 상황에 주목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⁴ 당초는 오키나와 반환을 둘러싼 외교사 연구와 오키나와의 주민 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오키나와 전후사 연구는 병립하고 있는 경향에 있었지만, 오키나와 반환 교섭을 미일류의 상호작용으로서 파악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⁵

한편, 주변 아시아 각국의 관점이나 각국이 오키나와에 관여하려고 한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최근에 연구가 시작되었다. 보고자는 이들을 포함시켜서 오키나와 반환까지의 역사를 검토하면 당시 동아시아의 안전보장 환경 뿐만 아니라 그 때 가시화되지 않았던 메이지 시대의 '류큐처분(병합)'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일본의 제국주의·식민지주의가 각국에 부여한 대일관이 부각되지 않을까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본 보고는 그런 문대의식을 바탕으로 2022년에 한국, 북한, 중화인민공화국, 중화민국의 오키나와 반환에

¹ 成田千尋『沖縄返還と東アジア冷戦体制—琉球・沖縄の帰属/基地問題の変容』(人文書院、2020年)、成田千尋『世界史のなかの沖縄返還』(吉川弘文館、2024年) 등.

² 대표적인 연구로 河野康子『沖縄返還をめぐる政治と外交—日米関係史の文脈』(東京大学出版会、1994年)、我部政明『沖縄返還とは何だったのか—日米戦後交渉史の中で』(日本放送出版協会、2000年) 등이 있다.

³ 新崎盛暉『戦後沖縄史』(日本評論社、1976年)、中野好夫・新崎盛暉『沖縄戦後史』(岩波書店、1976年)가 대표적이다.

⁴ 櫻澤誠『沖縄の復帰運動と保革対立—沖縄地域社会の変容』(有志舎、2012年)、同『沖縄の保守勢力と「島ぐるみ」の系譜—政治結合・基地認識・経済構想』(有志舎、2016年)、小松寛『戦後沖縄における帰属論争と民族意識—日本復帰と反復帰』(早稲田大学出版部、2013年)、島山淳『沖縄：基地社会の起源と相克—一九四五—一九五五』(勁草書房、2013年)、秋山道宏『基地社会・沖縄と「島ぐるみ」の運動—B52撤去運動から県益擁護運動へ』(八潮社、2019年) 등.

⁵ 宮里政玄『日米関係と沖縄一九四五—一九七二』(岩波書店、2000年)、明田川融『沖縄基地問題の歴史—非武の島、戦の島』(みすず書房、2008年)、平良好利『戦後沖縄と米軍基地—「受容」と「拒絶」のはざま—一九四五—一九七二』(法政大学出版局、2012年) 등.

관한 외교문서나 신문에 나타난 각국의 오키나와에 대한 견해를 검토한 보고⁶를, 한반도에 초점을 맞추어 재구성한 것이다.

1. 남북한 오키나와에 대한 관심의 변천

다음으로 한국의 오키나와 반환이나 전후 오키나와사에 관한 연구 상황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1950년대부터 중화민국과 함께 공고한 반공주의 정책을 취해 온 한국에서는 오키나와 반환 이전부터 오키나와 반환이 한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시사적인 논문이 발표되어 왔다.⁷ 또, 「오키나와」라는 단어로 「한국 연구 정보 서비스(RISS)」을 검색하면, 한국의 국내 학술 논문의 건수는 2006년경까지는 1년에 1자릿수~20건이었지만, 2007년 이후는 25~70건 미만으로 급증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오키나와 반환 교섭, 오키나와 전시에 오키나와로 끌려간 한반도 출신자에 대한 역사 연구가 진전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특히 오키나와 문학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⁸

또한 "Naver News Library"나 한국언론진흥재단 BIG KINDS의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에서 "류큐", "오키나와"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1940~50년대에는 "류큐", 1960년대 이후에는 "오키나와"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우선, Naver News Library에서 "류큐"를 검색하면, 후술하는 섬 전체 투쟁(島ぐるみ闘争)이 있던 1956년부터 1959년에 걸쳐 기사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1959년이 128건으로 제일 많다. 한편 오키나와(오키나와)를 검색하면 오키나와 반환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1969년이 8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오키나와 반환이 성사되는 1972년까지 1년에 약 400570건의 기사가 실려 있다.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의 경우는 1945년 8월 15일부터 1960년 12월 31일까지 설정하여 "류큐", "오키나와"라는 키워드로 검색해 보면, 다른 말도 섞여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는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전자는 313건, 후자는 589건이 히트한다.

북한의 연구 상황을 알 수 없지만, 한국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HP의 신문자료 부분에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의 데이터베이스로 "오키나와"를 검색하면 1950년부터 1972년까지 343건의 기사가 있으며, 오키나와 반환이 결정·실현되는 1970년 전후에는 1년에 25~30건으로 가장 많은 기사가 집중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시기에 따라 호칭은 변화하고 있지만, 한국 및 북한에서도 냉전기부터

⁶成田千尋「東アジアからみた沖縄返還」『アメリカ太平洋研究』23(2023年).

⁷이양준 『오키나와』 반환과 한국의 안보. 법정학보 13(1970년); 엄요섭 『오키나와』 반환문제 『새가정』(1971년); 성황용 「충승 반환문제와 한국안보문제에 대한 일본의 관심」, 『아세아연구』 14(4)(1971) 등.

⁸尹德敏 「美日 오키나와 返還協商과 韓國外交」 『國際政治論叢』 31, 1992; ヱィクター・D・チャ船橋洋一 監訳 『日米韓 反目を超えた提携』 有斐閣, 2003; 小林聡明 「沖縄返還をめぐる韓国外交の展開と北朝鮮の反応」 竹内俊隆 編著 『日米同盟論: 歴史、機能、周辺諸国の視点』 ミネルヴァ書房, 2011; 최희식 「한미일 협력체제 제도화 과정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45, 2011; 劉仙姫 『朴正熙의 対日・対米外交: 冷戦変容期韓国の政策 1968-1973』 ミネルヴァ書房, 2012; 崔慶原 『冷戦期日韓安全保障関係の形成』 慶應義塾大学出版会, 2014 등. 2022년에도 손지연 역은 『전후 오키나와 문학과 동아시아: 반폭력의 감수성과 소수자의 목소리』 (소명출판, 2022년), 손지연 외 『냉전 아시아와 오키나와라는 물음』 (소명출판, 2022년) 등의 오키나와에 관한 논문집이 출판되었고, 오키나와에 관한 일본 서적의 번역 출판도 증가하고 있다.

오키나와에 관한 관심이 어느 정도 존재했던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는 최근 들어 한국의 안전보장이나 오키나와와의 역사적 유사성에 대한 관심으로 오키나와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2. 오키나와 반환 둘러싼 남북한 인식 (1965 년 이전)

본 절 이후에서는 오키나와 반환을 둘러싼 한국, 북한의 인식에 대해 각각 1965 년 이전, 1965~72 년의 두 시기로 나누어 검토하고자 한다. 1965 년을 분기점으로 삼고 있는 이유는, 그 때 미국의 베트남 전쟁에 대한 본격적인 개입, 한일 국교정상화, 오키나와 반환 교섭의 구체화 등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1) 한국

1948 년 8 월에 성립된 한국의 초대 대통령이 된 이승만은 해외에서 조선독립운동을 전개해 온 점 등을 배경으로 공교한 반일·반공정책을 취했지만, 처음에는 오키나와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1950 년 6 월 한국전쟁 발발 이후 오키나와가 미군의 보급·출격 기지로 사용됨에 따라 오키나와 기지는 한국의 안보에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1953 년 10 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어 당시 미국의 통치하에 놓여 있던 오키나와가 이 조약의 적용지역이 되었다. 그러므로 휴전 이후에도 오키나와 미군기지의 존재가 한국의 안전과 직결되는 상황이 되면서 이승만은 한국의 안전에 대한 오키나와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오키나와의 독립보장론을 주장하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이승만 정권은 1954 년 중화민국 정부와 함께 아시아민족반공연맹 결성을 주도하면서 '류큐 대표'로 참여한 류큐혁명동지회 회장 차이장(蔡璋)을 중요시했다. 류큐혁명동지회는 1947 년 1 월에 발족한 “삼민주주의의 실행, 류큐의 해방, 중국으로의 귀속”을 회칙으로 하는 오키나와 출신자의 단체이며, 중화민국 정부의 대만 철폐 후에는 대만의 기륭(基隆)을 거점으로 하여 “류큐 독립”을 주장하고 있었다. 장제스가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 차이장은 종종 오키나와에도 도항해 언론 활동 등을 하고 있었지만, 오키나와에서는 거의 영향력을 가지지 못했다.⁹

같은 시기, 1953 년 이후의 토지를 둘러싼 오키나와 주민과 미군정의 대립 격화로 1956 년 섬 전체 투쟁이 발생하여 오키나와 사람들이 일본으로의 복귀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 서서히 밝혀져 갔다. 그러나 1957 년 1 월 12 일 한국 정부 공보실장이 발표한 담화는 일본은 소련 및 중공의 지시 하에 류큐열도를 그들의 식민지로 복구시키자고 고집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에 대해 미국이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 일본 제국주의자의 흥계를 분쇄하고 류큐 주민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하는 것이었다¹⁰. 이승만은 최덕신 주 남베트남 대사를 1957 년, 1958 년 두 차례에 걸쳐 오키나와에 파견하여 현지 상황을 시찰하도록 하였으나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¹¹

⁹ 상세한 것에 대해서는, 成田千尋 「1940~60 年代における中華民国政府の対琉球政策」 『二十世紀研究』 23・24 合併号 (2023 年) 을 참조.

¹⁰ 『경향신문』 1957 년 1 월 14 일.

¹¹ 「崔德新前外務部長官과 金亞洲局長의 “오키나와” 問題에 関한 面談要録」 1969 년 3 월 15 일,

이와 별도로 한국 정부는 1958 년 이후 미국 수출을 계기로 통상 관계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오키나와 시장의 규모가 적고 오키나와에서 수입 가능한 상품의 양도 적은 것을 이유로 한일 관계가 호전되자 오키나와에 대한 관심도 떨어졌다. 더욱이 1960 년 4 월 이승만 정권이 붕괴된 후, 1961 년 5 월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초기 박정희 정권은 오키나와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게 되었다.¹²

(2) 북한

한편으로, 남한 정부와 대립관계에 있던 북한은 남한 정부와는 대조적인 입장을 취했다. 1950 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키나와는 미군의 중요한 보급·출격 기지가 되었고, 오키나와에서 발진한 B-29 가 북한을 자주 폭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김일성은 오키나와를 “발전소 저수지 철도 교량 등을 파괴하고 평양, 원산, 함흥, 청진, 사리원, 해주, 남포, 신의주를 비롯한 대도시와 주민부락에 대한 무차별 폭격을 감행해 무고한 인민을 무차별 학살”한 “미제의 조선 침략기지”라고 표현했다.¹³ 다만 이 때문에 오키나와 사람들을 적대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키나와를 일본의 일부로 보고 복귀운동에 연대하고 함께 아시아에서 미군을 몰아내자고 주장하게 됐다. 우선 1955 년 4 월 인도에서 열린 아시아국가회의에서 채택된 오키나와의 일본으로의 즉각 반환을 요구하는 건의에 따라 『노동신문』은 “오키나와는 일본으로 반환돼야 한다”는 기사를 실었다.¹⁴

이후 1956 년 섬 전체 투쟁이 일어나자 북한에서는 오키나와 상황에 대한 보도가 증가해 갔다. 특히 이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공산당계 정당인 인민당에 속한 세나가 가메지로(瀬長亀次郎)의 동향이 주목받으면서 1957 년 11 월 미군 당국이 세나가를 추방하자, 노동신문 편집위원회는 “오키나와의 영구 강제 점령을 위한 파쇼적 조치”라는 단평에서 이를 “파쇼적 행동”으로 비난했다. 여기서는 “오키나와는 일본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라는 표현이 사용됐다¹⁵. 이후에도 일본 오키나와 반환운동과 오키나와 인민당의 동향에 대해 주로 일본과 중국발 보도 등 2 차 정보에 근거한 보도가 이뤄졌고, 1963 년 “오키나와 데이(沖縄デー)”가 정해지자 북한은 이를 “오키나와의 날”로 규정하고 오키나와가 반환되기 전까지 4 월 28 일 이와 관련된 행동을 계속했다.¹⁶

이처럼 이승만 정권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오키나와가 한국의 안보에 중요하다고 인식하게 되었고, 아시아민족반공연맹을 통해 중화민국 정부와도 제휴하면서 오키나와의 독립보장론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1950 년대 후반 중류문화경제협회와 국민당의 설립에 관여하여 직접 오키나와와 문화·경제 교류 관계를 구축하려고 했던 중화민국 정부와 비교하면 오키나와와의 직접적인 관계 구축에는 소극적이었고, 관심도 일관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일본간 오키나와(沖縄) 반환문제 전 2 권』 V·1 1969·1-6 月 (분류번호 722·12 JA/US, 등록번호 2958) 한국의교사료관.

¹² 成田千尋「日韓会談と沖韓通商交渉：米穀輸出問題に着目して」『朝鮮史研究会論文集』61(2023 年).

¹³ 임경화 「'분단'과 '분단'을 잇다 : 미군정기 오키나와의 국제연대운동과 한반도」『상허학회』44(2015), 234 쪽.

¹⁴ 『労働新聞』1955 년 4 월 25 일.

¹⁵ 『労働新聞』1957 년 11 월 28 일.

¹⁶ 임경화, 「'분단'과 '분단'을 잇다」, 245-247 쪽.

한편 한국전쟁 때 오키나와가 미군의 출격기지로 사용되자 북한은 한국과 반대로 오키나와의 미군기지를 미제의 조선 침략기지로 인식했다. 그리고 오키나와를 일본의 영토로 간주하고 일본의 오키나와 반환 운동, 오키나와의 복귀 운동에 연대하는 보도·행동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3. 오키나와 반환을 둘러싼 한국·북한의 인식(1965년~1972년)

본 절에서는 앞 절과 마찬가지로 각국별로 오키나와 반환이 실현될 때까지의 인식 변화에 대해 검토한다.

(1) 한국

미국이 1965년 베트남전에 본격적으로 개입하자 한국 정부가 한국군을 베트남에 파병한 데 대해 북한이 반발하면서 한반도 정세는 급격히 악화돼 갔다. 1968년 1월 말 청와대 습격 미수 사건과 미국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가 북한에 납치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위기는 정점을 찍었다. 이후 한국에서는 오키나와 기지의 제주도 이전론, 아시아판 NATO 구상이라고 할 수 있는 APATO 구상 등 안보 강화를 위한 여러 방안이 제기되지만 미국 측이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어느 것도 성사되지 못했다.

이러한 가운데 오키나와·일본에서의 복귀/반환 운동의 고조를 배경으로 1965년 이후 미일간에 오키나와 반환 교섭이 진행되었다. 오키나와에서는 1968년 11월의 류큐 정부 주석 공선 선거에서 즉시 무조건 전면 반환을 주장하는 야라 조묘(屋良朝苗)가 당선된 직후, 카테나(嘉手納) 기지에서 B52 전략 폭격기의 추락 폭발 사고가 발생해, 주민이 B52 나 핵무기의 철거를 호소하기 위해서 섬 전체의 총파업을 계획하는 사태가 되었다. 결국 총파업은 실시되지 않았지만, 1969년 3월 이후 미일 간 오키나와 반환 협상이 본격화되자 한국 정부는 이를 자국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기 상황으로 파악했다. 한국 정부는 오키나와의 기지 기능 유지를 요구하며 미일 양국 정부를 압박했고, 정부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실제로는 미일 양국 정부 모두 오키나와 안보상의 중요성을 훼손하지 않는 형태로 반환을 고려하고 있으며, 같은 해 11월 사토 닉슨 공동성명이 발표되었을 때 일본 정부는 사전에 박정희 대통령에게 친서를 송부하고, 가나야마 마사히데(金山政英) 주한 일본대사가 핵과 사전 협의를 포함한 미일 간의 협상 결과 개요를 전달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노력에 이해를 표시하면서도 사회당 등 좌파의 동향에 따라 기지 사용이 제한될 가능성에 우려를 표시하고 오키나와 반환 이후에도 기지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닉슨 독트린의 일환으로 주한미군 감축이 한미간 현안이 되면서 한국의 안보 불안은 더욱 고조됐다. 한국 정부가 오키나와 반환 협정을 둘러싼 미일 협상에도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1971년 6월 오키나와 반환 협정이 조인되기에 앞서 일본 외무성은 반환 협정의 개요에 대해 설명하고 서명 이전의 협정안을 제공해 달라는 한국 측의 요청에도 응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한국 정부는 사토

닉슨 공동성명의 내용에 비춰 오키나와가 일본에 반환되더라도 한국의 안보에 관한 한 특별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게 됐다. 그러나 오키나와에 존재하는 한반도 출신자(재오키나와 조선인)의 지위를 둘러싼 문제와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의 오키나와 침투 가능성이 한국 정부에 현실적인 문제로 떠오르게 됐다.¹⁷

(2)북한

오키나와현 조국복귀협의회가 요구하는 반환의 형태로서 장기 이민족 지배에 대해서는 “즉시”, 핵부 조건에는 “무조건”, 분리론에는 “전면 반환”을 대치한 “즉시 무조건 전면 반환”¹⁸을 1967년에 내걸면 1968년 1월 이후, 『노동신문』에서도 이 슬로건에 대한 지지가 표명되게 되었다. 예를 들어, 1968년 1월 11일 지면에서는 “「즉시, 무조건, 전적으로 반환하라」 오키나와, 오가사와라(小笠原) 반환을 요구하는 일본 인민의 투쟁”이라는 제목으로 일본에서 오키나와 반환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거기서 일본 공산당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등을 소개하는, 이 신문 기자에 의한 서명이 들어간 기사가 실려 있다.¹⁹

1969년 11월에 사토 닉슨 공동성명이 발표되자, 『노동신문』은 “이 섬(오키나와)을 계속 미국 제국주의의 흉악한 핵 기지로서 유지하고, 나아가 일본의 전 영토를 오키나와와 같은 미국 제국주의의 핵기지로 되돌리려고 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미국 제국주의자와 일본 군국주의자에 의한 “아시아에 대한 침략적 공모 결탁”이라고 비난했다²⁰. 이어 1969년 12월 4일 미군이 오키나와 미군기지 고용자의 대량 해고를 발표하자 『노동신문』은 1970년 1월 이후 기지 고용자로 구성된 전 오키나와군 노동조합의 해고 철회 투쟁에 지지를 표명하게 되었다²¹. 중국의 『인민일보』도 오키나와 반환 합의를 “미국을 흑막, 일본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침략적 군사동맹을 기도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으며²², 김일성 주석의 초청에 응해 1970년 4월 저우언라이(周恩来) 중국 총리가 북한을 방문했을 때, “미 제국주의의 적극적 보호 아래 일본 군국주의는 이미 부활”했다고 하면서 반미 투쟁을 추진하는 동시에 일본 군국주의에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하겠다는 결의가 표명됐다.²³

1971년 6월 17일 오키나와 반환협정이 발표되자, 북한 외무성은 북한 정부와 모든 조선인민은 오키나와 반환협정을 “아시아에 대한 공동침략을 실현하기 위한 미일반동의 흉악한 군사정치적 음모”이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아시아 사회주의국의 안전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며, 단호히 규탄하는 성명을 6월

¹⁷ 오키나와 반환 후의 오키나와를 둘러싼 한반도의 남북의 대립 상황에 대해서는, 成田千尋「沖縄の韓国人慰霊塔建立と冷戦体制」同志社大学コリア研究センター叢書4『植民地主義、冷戦から考える日韓関係』(同志社コリア研究センター、2021年)을 참조.

¹⁸ 沖縄県祖国復帰闘争史編纂委員会編『沖縄県祖国復帰闘争史』(沖縄時事出版、1982年)、463쪽.

¹⁹ 『労働新聞』1968년 1월 11일.

²⁰ 『労働新聞』1969년 11월 24일.

²¹ 『労働新聞』1970년 1월 20일, 1월 28일 등.

²² 『人民日報』1969년 11월 28일.

²³ 『朝日新聞』1970년 4월 9일.

20 일 발표했다²⁴. 그 직후 시작된 미·중 접근 후 아시아에서 미군의 존재를 '병뚜껑(瓶のふた)'으로 정당화하는 미국의 주장에 동조한 중국은 서서히 "미·일 반동파의 결탁"이라는 비판을 약화시켜 갔지만²⁵, 북한은 자세를 바꾸지 않았다. 그리고 1972 년 5 월 15 일 오키나와의 시정권이 반환되었을 때, 평양 신문들이 오키나와 반환의 기만성을 규탄하고, 『노동신문』도 오키나와 반환을 비판하는 동시에 미일 안보조약의 폐기와 오키나와의 무조건적 전면 반환을 요구하는 일본 인민에게 조선 인민이 "단단한 전투적 연대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도했다.²⁶

이상과 같이 1965 년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고 한반도 정세가 긴박해지는 가운데 1969 년 미일 협상이 본격화되었다. 이에 대해 오키나와 반환에 따른 미군기지 기능 저하를 우려하는 한국 정부는 오키나와 반환 자체에 대해 노골적으로 반대하지 않게 됐지만, 정부와 손잡고 오키나와 기지 기능 유지를 요구하려 했다. 미일 양국 정부도 기지 기능 유지를 의도했지만 일본 여론의 반발을 우려해 1969 년 11 월 미일 공동성명에서 오키나와의 '72 년 핵 제거 본토 수준' 반환이 발표됐을 때, 한국 정부 및 정부에는 오키나와의 기지 기능이 유지된다는 사실이 비밀리에 알려졌다. 한편, 양자와 적대하고 있던 북한(및 중국)은, 오키나와 반환 합의를 "일미 반동파에 의한 결탁"이라고 보고, 제후를 강하게 했다.

그러나 오키나와 반환의 기정사실화와 1971 년의 미·중 접근에 의해 오키나와를 둘러싼 각국의 제후 관계에도 변화가 생겨났다. 이에 따라 한국도 중국에 대한 접근을 조금씩 시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반공'을 기치로 한 중화민국 정부와의 공고한 관계는 유지할 수 없게 된 한편, 중국이 아시아 미군기지의 존재를 인정하게 됨에 따라 북한과 중국 사이에도 입장 차이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처럼 1970 년대 들어 동아시아의 국제질서가 변화하는 가운데 현 상황이 유지되면서 오키나와의 미군기지도 고착화됐다고 볼 수 있다.

마치며

본 보고에서는 주로 1965 년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남북한이 오키나와의 귀속/기지 문제를 어떻게 인식해왔는지를 검토하였다. 양국 모두 한국전쟁을 계기로 오키나와를 자국과 연결시켜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이지만, 오키나와가 미군의 보급·출격기지 등으로 활용됐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자국 안보에 중요하게 여겨지는 반면 북한에게는 '미제의 조선 침략기지'로 여겨졌다. 또 한국 정부는 오키나와의 일본 반환을 일본에 의한 재식민지화로 간주해 독립자치를 원했지만 북한은 오키나와에서의 미군 철수를 원하고 일본의 오키나와 반환운동, 오키나와의 복귀운동에 연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됐다.

1965 년 이후 복귀/반환 운동의 고조를 배경으로 오키나와 반환 교섭이

²⁴ 『노동신문』 1971 년 6 월 21 일.

²⁵ 앞의 「東アジアからみた沖縄返還」, 58-59 쪽.

²⁶ 『노동신문』 1972 년 5 월 17 일; 『朝鮮時報』 1972 년 6 월 3 일.

본격화되자, 한국 정부는 오키나와의 일본 반환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게 되었지만, 중화민국 정부와 함께 오키나와 기지 기능의 유지를 주장했다. 한편 북한은 계속 미일안보조약 폐기와 오키나와의 무조건적 전면 반환을 주장하는 일본 인민에 연대를 표명했다. 한반도의 남북 분단구조가 지속되고, 미국이 일본 및 한국과 동맹관계에 있는 한 오키나와의 미군기지는 한국의 안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구조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